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 분석 :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정주신 대전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동서독 주민들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있다. 즉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통일 독일 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 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해 낸 역할론은 남북한 주민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대중행태적 측면 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특히 동서독 주민의 역할 분석은 전개과정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 는 상징성을 아직도 공고한 대립 상태의 한반도의 DMZ와 연결시키고 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일은 정상회담의 댓가가 아닌, 동서독 주민들의 자발적, 비정치적인 통합의 산물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독일통일과정, 동서독 주민, 베를린 장벽 붕괴, 남북한 통일, 북한이 탈주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2158).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이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글은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통일 독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남 북한 통일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통일 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통일 한국을 위해서라도 비정치적 분야의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든 이에 대비하여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해 낸 역할론은 남북한 주민으로서의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합한 벤치마킹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 목적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독일 통일의 선행연구는 정치적 관점 혹은 수상의 리더십, 기민·사민 정당 노선이나 초당적 협력, 동방정책, 동서독 정상회담, 또는 국제관계의 산물인 양 동서독 통일과정을 내세울 뿐, 독일 통일 주체로서의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즉 독일의 통일 방식에서 그동안의 연구자들은 동서독 주민들의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역할론과 존재성 부각이나 그 후속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초점은 대중들의 욕구에서 분출된 통일에 대한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힘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두고, 북한 주민들의 역할을 반영하는 통일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궁극적으로 서독TV와 라디오 및 위성통신 등 미디어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경제적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고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가치를 지닌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은 질 높은 서독TV를 동독 주민들이 시청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는 점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동독 주민들의 서독TV 시청은 게르만 민족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중대한 역사적 분수령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 당시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독TV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동독이 가시청권에 속수무책으로 수용된 셈이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고르바초프의 ‘페데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은 동구권을 공산주의 패권 내로 묶어 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었고, 이는 당시 동독 주민들의 억눌린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자극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은 동구 공산권에 자유와 민주주의 불씨를 피운 사례임을 동독이라고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일 분단 이후 각종 대내외적인 통일 노력은 있었지만,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극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없다. 적어도 1989년 봄 이전까지는 통일정책이라는 접근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소련은 물론 동독조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공산주의 패권 논리와 그 강압적 태도는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동안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열기나 베를린 장벽 붕괴 등 그들의 활약상을 간과한 결과, 한국에서 독일통일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벤치마킹을 해오지도 못한 결과나 다름없다.

넷째, 독일통일과정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와 열정에 의한 것이지 동서독 당국자 간의 정상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가 있다. 독일통일에서 결정적인 물꼬가 트인 날은 1989년 5월 2일 헝가리 정부가 국경 철조망 제거 작업을 선언한 날로부터였다. 그날 이후 주변 환경이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동독 주민들은 미디어 보도 등의 여세를 등에 업고 서독과의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하면서도 베를린 장벽을 허물은 것은 동서독 정치가들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협상 수준이나 대책을 앞질렀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한국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3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 숫자가 잠정적으로 3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점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가서 살고 싶은 열정이 묻어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은 2000년도 이전까지 한해에 몇 백 명이던 것이 2000년대 초반(2000~2005)으로 들어서면서 한해에 1천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 중반(2006~2011)에는 한해에 2천5백여 명 안팎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1천5백여 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통일 독일이 동독인의 탈출과 이주에서 나타나고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만큼, 통일 한국에서 통일의 견인차는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첫째, 독일 통일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독일 통일에 대한 개괄적인 저서 위주, 즉 분단과 통일의 현대사를 다룬 연구(백경남 1991; 서지원 역 2004; 정용길 2009), 동방정책(신인아 2008; 최영태 2018; 정용길 2009; 전종덕 2019; 비피정치연구소편집부 2018; 손선홍, 2016),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김영탁 1997), 동북명망보고서(프랭크 지렌·귄터 샤보프스키, 심재만 역, 2016), 위성방송의 역할(심영섭 2015), 제정헌법의 역할(권형돈 2012), 재산반환문제(박진완 2014), 국제관계(김학성 2002; 알렉산더 폰 플라토 2010), 동서독 청소년 교류(신두철 2014), 복지국가 역할(이정우 2011), 그리고 분단극복의 경험 등을 다룬 것(신선홍 2005; 김국신 외 1994)이다보니, 직접적으로 통일독일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동서독 주민들과 관련한 연구가 부진한 보여주는 한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독일통일은 동서독 주민들의 대가였지만, 그간의 연구 과정에서는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동서독 정상회담이나 서독 수상의 몫 혹은 동방정책이나 통독 전개

과정상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가져다 준 미디어나 위성방송 등 사회문화적 측면을 간과해 온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정당 혹은 정치 집단 혹은 단체 중심의 미시적 관점에서 논의, 이를테면 독일통일과정에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서병철 편 2003; 정병기 2003), 독일 통일의 당내 역학 관계 내지는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유진숙 2011), 개별 수상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유진숙, 2008; 안병익 역 2000), 독일 및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연구(정병기 2011; 김면희 2010; 김종갑 2003) 그리고 독일통일에서의 특정 정당의 고찰 및 역할론, 혹은 기민련·사민당 등 각 정당별 노선의 결과나 초당적 협력(김경미 2002; 김도태 1996; 고상두 2015) 등 정당 내의 역학관계를 둘러싼 파워게임이나 특정 정당의 사례, 그리고 동독 내 정당체계에 머물고 있어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한 동서독 주민들의 노력이 묻혀버렸다. 그 결과 동서독 주민들 주체로서의 역할이 통합 전개 과정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등 그 빛을 보지도 못해 진정으로 동서독 주민들의 대중행태적 참여나 역할론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치적 혹은 수상의 리더십, 기민련·사민당 등 각 정당별 노선의 결과나 초당적 협력, 또는 국제관계의 산물인 양 동서독 통일과정을 내세울 뿐, 독일의 통일방식의 모델에 따라 한반도 통일 모델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론과 북한 주민 및 탈북주민의 존재성 부각이나 사회문화적 측면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선행연구가 이처럼 동서독 통일이 동서독 정상회담이나 국제관계 산물의 결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연구는 동독 주민들의 역할론과 서독TV나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란 사회문화적 측면을 간과한 측면이 농후하였다. 그 결과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열기나 베를린 장벽 붕괴 등이 독일 통일의 바로미터라 했을 때, 한국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벤치마킹을 해오지도 못했다.

이 글은 주로 분단 이후 동서독이 실시해 온 접촉과 교류나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인적교류, 즉 동서독 간 상호의 교통문제와 방문 여행,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인적교류라 할 수 있는 동서독 이주민 문제 등 대중행태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적요하고자 한다.

첫째, 동서독 관계에서 대두된 교통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서베를린이 동독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으로 분단은 나치 독일의 최종 패배와 점령 등 전후 처리 문제에서 승전4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정태일 외 2020, 100-101). 그런데 독일 분단의 핸디캡은 동독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위성세력으로 분단되었다는 것이다(Schwarz 2010, 133-153; 신종훈 2013, 404). 다만 승전4국이 맺은 동서 베를린의 교류에 관한 ‘베를린 협정’에 따라, 소련은 ‘서베를린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협정’(1971.9.3.~ 1990.9.12.)을 유지해왔었다(김영운·양현모 2009, 350). 서베를린의 경우 영국군·프랑스군·미국군의 육군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나뉘고, 출입시 검문을 하는 것도 서독 국경경비대(BGS)가 아닌 미국·영국·프랑스 3국 육군이었고, BGS가 그저 보조에 불과한 반면, 동독의 수도 역할을 한 동베를린 역시 공식적으로는 동독 정부의 관할지역이 아닌 소련군의 점령지역이 되었다(정주신 2021, 270).¹⁾ 게다가 동독 내에 속한 서베를린이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으며, 서독으로서는 서베를린이 월경지가 되었다(정주신 2021, 270). 서베를린은 서독과 연결돼야 존립할 수 있는데, 서독으로부터 179km 떨어져 있어 생존능력 없는 고립된 섬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독은 서베를린의 지정학적 약점을 이용해서 서방측과 서독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고 난 뒤 1,900만 명 동독인 가운데 35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갔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뒤 서독으로 넘어가려다 사망한 동독인 수는 1,000여 명에 이르렀다.²⁾

1) [https://namu.wiki/w/베를린 장벽](https://namu.wiki/w/베를린_장벽)(검색일: 2020/11/13).

2) <https://blog.naver.com/samsum3535/222268625272> (검색일: 2020/03/21).

1960년대 들어 동독의 베를린 왕복교통에 대한 감독과 방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1968년 6월 동독이 서독인들에게 베를린 왕복 교통 관련 비자와 도로사용료 및 정부간 협정을 요구한 반면, 서방측과 서독은 동독을 정부로 승인이 어렵고 소련과 회담을 통해 서베를린의 자유로운 교통문제를 조약체결하자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그런데 브란트(W. Brandt)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교통문제에 관한 서독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1958년부터 1963년 사이의 베를린 위기와 동독의 베를린 장벽의 건설 때 브란트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기를 높였다. 1971년 9월 전승4국이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면서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왕복 교통은 동서독 정부로 위임하였고, 1971년 12월 육로, 철로 및 수로를 이용하는 베를린 교통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이어 서베를린시(市)는 동독 정부와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방문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72년 5월 동서독은 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물적 통행 전반에 관한 조약'(교통조약)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1972년 12월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서독 간 교통조약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 교통조약은 동서독 왕복교통을 보장하는 기본틀이 되었다. 위와 같은 조약은 전승4국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동서독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장차 독일문제는 독일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동서독 분단 이후 동서독 주민 간의 방문여행 왕래는 동독측의 잦은 제한 조치로 어려움이 존재했어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1953년 11월 서독은 미·영·불 전승3국이 점령지역 간 여권제도를 폐지한 후 동독인을 포함한 모든 독일인들은 기본법에 따라 자유여행은 물론 거주지 이동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동독은 소련 군정청이 점령지역 간 여권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인의 상호 방문과 거주이전에는 각종 제한을 가했다. 한편 분단 이후 동독은 동독에 가족을 두고 있는 서독인들에게 1년에 1회 방문을 허용, 최장 4주일까지 머물게 하였다. 이런 엄격한 조건에서도 1954~1957년 동안 매년 평균 240만 명의 서독 주민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1958년 베를린 위기가 조성되자

1958~1962년 동독을 방문한 서독 주민이 매년 평균 70만 명 내외로 급감하였다. 1961년 소련 측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직후에는 방문 여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1963년 동서냉전이 완화되자 동독은 서독 주민의 동독방문 허가서를 대량 발급했으나 1964년 11월~1968년 최소 의무환전제도(동독 5마르크~10마르크) 도입, 1966년 12월 여권법 개정으로 특정인의 동독방문 금지, 1968년 6월 여권법 개정으로 서독인의 동독방문 시 비자 수수료 징수하였으나, 1967~1972년 연평균 130만 명의 서독 주민이 동독여행을 하였다. 1972년 10월 교통조약 발효 후 서독 주민의 동독방문이 비약적으로 증가, 1970년 중반에 매년 300만 명에 달했으나, 1980년 초 미·소냉전으로 연평균 200만 수준으로 줄었다. 1983~1984년 서독 정부가 19억 5천 마르크 상당을 동독에 제공,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1987년 호네커의 서독방문 등이 서독 주민의 동독방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86년 이후 매년 370만 명의 서독 주민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독을 대결의 상대가 아닌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 브란트 수상의 결단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서독인들의 동독방문 기회와 그 작용은 훗날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굳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문화적으로 분단된 독일이 동독 주민의 서독방문 허용은 방문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까다롭기도 한 것이었다. 동독 주민의 서독방문은 동독 정부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이기 때문에 분단국으로서 서독 정부와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였다. 1953년 6월 까지 공무 여행을 제외한 다른 여행, 즉 서독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53년 6월 민중봉기³⁾ 이후 동독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서독방문을 대폭 허용하였다. 그리하여 1954~1957년 연평균 250만 명의 동독주민이 서독

3) 1953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지속된 6월 봉기는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동베를린의 노동자들이 일으킨 대규모 항쟁이지만, 소련군이 개입한 끝에 강제로 진압되었다. 이후 동독은 울브리히트(W. Ulbricht) 주도의 공산주의 체제로 강화되었다.

을 여행하였으며, 그중 4% 이상이 서독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은 1957년 여름, 학생들의 서독방문 단체여행 금지, 곧이어 여권법을 개정으로 서베를린을 제외한 서독방문 통제, 1961년 베를린 장벽설치 후 공무 여행만 허용해 1958년 이후 서독 방문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1962년 한해 2만7천 명만이 서독방문을 허용하였다. 한편 1964년 11월부터 동독 주민의 서독방문은 두드러졌다. 동독은 당시 연금생활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나 상이군인들에게 1년 1회 4주간 서독이나 서베를린 방문을 허용하였다. 1972년 10월 동서독 교통조약 발효로 동독은 방문조건을 완화, 연금생활자 외 친척의 가정사정을 고려해 동독인 누구든지 1년에 30일 범위(1984년 이후 방문 기간 60일로 확대)내 몇 번이고 서독방문을 허용하였다. 이 조치에 힘입어 1973~1985년에 연금생활자는 매년 130~150만 명, 일반 주민 매년 4~6만 명 정도가 서독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1986년~1987년에는 연금생활자는 380만 명, 일반 주민 13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일반 주민의 서독 방문이 폭발적 증가와 동독 주민의 대량 이주사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시에 동독 주민의 서독에 가서 살고 싶은 열정과 충동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동독 주민의 서독방문 시 서독 정부의 재정지원이 한몫했다는 증거이다. 서독 정부는 1972년~1987년 8월까지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에게 1인당 1년에 2회(30마르크), 그 후에는 1년에 1회(100마르크)의 환영금을 지급했다. 1987년 방문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환영금 인상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1987년의 통계에 따르면 동서독 간 광범위한 민간교류를 통하여 이주·방문·관광여행·수학여행 등 서독인 550만 명, 동독인 220만 명이 상호 방문하였다.

넷째, 서독의 TV와 라디오 및 위성통신 등 미디어는 동독 주민들에게 독일통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였다. 동독TV가 체제유지와 관련 너무 정치적 일색일 뿐만 아니라 천편일률적이고 편파적이어서, 동독 주민들은 동독TV보다 자유분방한 서독TV를 훨씬 자주 시청하였다.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장면을 서독TV를 통해 지켜봤다는 데서 동독 미디어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실제 분단 기간 동안 동독에서 서독의 TV나 라디오를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것은 동독 정부의 기술적 한계에 원인이 있었다(심영섭 2015, 59). 동독 주민들은 1989년 5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과 9월 부다페스트와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대사관에 동독 주민이 몰려든 장면, 그리고 10월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던 대규모 시위 장면 등을 서독TV로 생중계 돼 큰 파장을 느꼈었다(배기정 2005, 366). 이러한 서독TV를 지켜본 동독 주민들은 동독 공산당의 방해와 탄압에서도 1989년 가을 이전에 음성적으로 정치적 저항운동의 기틀을 세우게 되고 급기야는 ‘가을혁명’과 베를린 장벽 붕괴의 주제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서독은 서독기본법⁴⁾의 국적조항에서 동독주민도 독일국적을 가진다고 규정, 모든 독일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주민은 기본적으로 서독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동독 이주민의 지나친 유입이 단순한 방문이나 여행과 달리 주택문제, 직장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독은 1950년 이주민수용법 제정, 1951년 이 법의 시행령을 공포해 이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이주민 중에는 동독정부의 하가를 받고 넘어 온 합법이주민과 허가 없이 탈출해 온 탈출이주민이 있으며(김현정 2020, 188), 그 외 서독정부가 동독측에 지불하고 데려온 정치범 등이 있었다. 그러나 동서독 분단 이후 동서독 간 이주에 결정적 영

4) ‘서독기본법’은 독일이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4년만인 1949년 5월 8일 제정된 것으로, 서독의 정치적 안정과 그 이후 동독과의 통일에 적용되어 독일 혼란기의 정치적, 헌법적 의미를 지닌 법이 되었다. 이 법은 전승4국의 독일 분할 점령 상태로 제한의회가 아니라 점령지역 11개 주의 주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의회평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즉 서독이 독립된 국가의 헌법(Verfassung)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법(Grundgesets)으로 제정된 것이다.

향을 미친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설치임에 틀림없다. 장벽설치 이전 기간(1950년~1961년)에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주자가 400,315명인 반면, 동독의 기술자·전문직업인·지식인들 250만 명을 포함해 3,854,522 명이 서독행을 택함으로써 동독의 경제력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김현정 2020, 187).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동독의 경제정책 실패로 1950년부터(1950년대 초에는 상당수가 미등록자여서 제외)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구축될 때까지 이탈 동독인의 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22만 명, 총 256만 명에 달하였다(Wendt 1991, 390).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후 이주민 숫자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1961년~1988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은 60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 기간 중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이주민도 급격히 줄어 7만 명에 불과했다.⁵⁾ 다만 동독 정부는 1984년부터 처음으로 연금생활자가 아닌 일반 주민까지 서독 이주를 허용했다. 한편 1989년 동독 내 정치적 이유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한 동독 이주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 약 39만 명, 1990년에는 약 40만 명에 이르렀다.

이 연구 과제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독일통일과정 연구배경의 주도적 관점이었던 수상 리더십 측면, 정당 및 법·제도적 측면, 주변 환경적 측면을 부수적으로 보고, 대신에 사회문화적 측면과 대중행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전/이후가 다른 만큼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의 역할, 주변 국가의 역할은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보조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을, 통일을 전후해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보다 더

5) <https://blog.daum.net/msk1953/13747743> (검색일: 2020/06/21).

디테일하게 동서독과 남북한의 인적교류 및 상대국 방문여행의 역할 분석을 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 분석에 관한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를 구분해서 동서독 주민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의 동독 주민의 역할과 서독 주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되, 보조적으로 동서독 정부의 역할, 주변 국가의 역할 등을 적요한다. 이러한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의 역할 요인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전에 승전4국과 동서독 정부 및 주변 국가들이 분단체제 틀 속에서 통일과정 역할이 한계에 머물렀음을 의미하며, 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그 이후 동서독 통일을 추동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크게 기인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 시기 분단 독일의 사례가 향후 분단 한국 및 통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분석한다.

Ⅲ.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

여기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동유럽의 민주화가 마침내 동독에서 촛불시위로 이어진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동독 당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국경개방이라는 ‘말실수’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재촉하였음을 설명한다.

1. 동독 주민의 역할

① 1985년부터 소련 고르바초프(M. Gorbachev)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9년 동구유럽 개혁은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통일 여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45년 전승4국에 의해 독일이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으로 이중분할로 분단되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까

지 근 40년간 동독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통일 역할은 전무한데서 동구 유럽의 자유화 내지 민주화로 진전되면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조짐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개방 발언은 냉전이 해체되는 서막을 알린 셈이다(정주신 2020b, 161). 궁극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사의 흐름이 완전히 독일 통일의 바뀌게 된 것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였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개혁과 개방 정책은 기존의 공산화 정책을 뒤엎는 혁명이었고 동서진영 대립의 상징인 동서독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김주삼 2020, 127), 동독 주민들을 공산체제에서 해방시켰고 급기야는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동력자로 만들었다. 1989년 일련의 동구의 민주화와 1989년 10월 동독 내의 촛불시위 등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초동체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② 동독의 경우 동독 시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숫자의 동독 시민들이 동독을 벗어나 서독으로 탈출하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는 등, 동서 베를린을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 전까지는 정치적 활동 및 사찰활동 강요, 양심 및 기본권침해 등을 주요 이유로 이주하였으나 베를린장벽 설치 후부터 1990년 통합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정치적 동기 뿐 아니라 낮은 생활수준과 근로상황 등 열악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허준영·정다원 2017, 64). 반면 동독으로 이주한 서독주민은 대부분이 연금 생활자로 동독 내 가족재결합 목적의 이주가 주류를 차지하였다(김현정 2020, 187-188). 탈출 동독인과 서독행 이주민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독일 통일을 위한 동독 주민의 의지 결행으로 볼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 시기에 동·서독 간 생활수준이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탈출 동독인과 서독행 이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즉 동독인들이 동독이 싫어서 삶의 질이 높고 정치적 자유가 많은 서독으로 이주한 것이었다. 결국 동독 주민의 대량 이주사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시에 동독 주민의 서독에 가서 살고 싶은 열정과 독일

통일의 총동감을 싹 틔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분단 이후 동서독 간 이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이겠지만, 동서독 간 이주는 양측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상호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 동서독 주민 간의 이주와 방문·여행의 형태로 이루어진 인적교류는 분단 동서독 관계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왔고 급기야는 동독 주민의 폭발로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고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는 독일 통일을 촉발시키게 되고 동독 경제가 더욱 악화일로에 내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③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1개월 전인 1989년 10월 9일 동독 주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는 당시 동독 정권의 유형 진압, 발표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는 1989년 5월 2일 헝가리 정부가 국경 철조망 제거 작업을 선언한 날이 동독 주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서독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물꼬가 트인 날과의 연장선상을 의미했다. 이는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직전 동서독 통일의 여망을 가져온 정치가들의 협상 수준이나 대책을 앞질렀다는 의미이다.

④ 동독 공보담당 정치국원 샤보브스키(G. Schabowski)의 ‘말실수’는 즉각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에 집결하게 되었고, 그 열기는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 요체가 되었다(정주신 2020b, 162-163; 정주신 2021, 278). 1989년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당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권 터 샤보브스키가 정부 대변인으로 나와 여행 자유화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이때 한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체 없이 당장' 시행된다고 '말실수'를 했다(정주신 2020b, 162-163; 정주신 2021, 278). 결국 동독에서의 민주화 시위의 확산은 동독 정부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의 발표를 이끌어냈다. 독일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자유와 통일을 염원하는 동서독 주민들에 의해, 무지한 동독 공산정권 지도부 대변인의 ‘말실수’에 의해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직접적 원인은 동독 공산당 공보담당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말실수’가 부른 나비효과에 있었지만, 그 배경은 1989년 동구권 개혁과 민주화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다. 동독 공산당 대변인의 말실수 직격탄으로 사태가 급속하게 진전되자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미디어 보도의 여세를 등에 업고 즉각적인 독일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서독 주민의 역할

① 서독 기본법 전문에는 “전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의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는 서독 주민은 물론 동독 주민에게도 통일의 주체이고 대상자란 의미이다.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 주민은 기본적으로 서독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서독 주민이나 동독 주민에게 통일 과업을 달성하는데 긍정적 역할 미쳤듯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당시 동독 주민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곧장 서독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독 기본법의 국적조항에서 동독 주민도 독일 국적을 가진다고 한 규정은 동독 주민에게도 이주나 동독 탈출을 통해서 서독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끔 해놓아 독일 통일 유인요인으로서 동독 주민을 서독 주민으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결국 서독의 정치적 안정과 그 이후 동독과의 통일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법이 동독 탈출자나 서독으로의 이주자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독 주민으로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독 주민을 받아드릴 수주는 역량을 지녀온 셈이었다.

②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서독 주민들의 통일 의지와 열망은 매우 낮았다.⁶⁾ 통일 의지와 열망이 매우 낮은 이유는 독일 국민의 국수주의적 태도, 오랫동안 통일의 불가능 체험, 전범국으로 전승4국에 의해 분단된 처지에서 통일 언급이 통일 방해로 내몰리

6) <https://blog.naver.com/ipa1983/160228761> (검색일: 2021/02/15).

는 행위 금기시, 서독의 안정된 복지체제 악영향 초래 염려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서독인은 통일이 중요하다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독 주민들은 오랫동안 나치의 죄과를 반성해 오는 동안 통일보다는 자유, 독일 통일보다는 유럽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받아 왔다.⁷⁾ 다만 서독 주민들의 통일 생각은 1989년 10월 동독 촛불시위가 무르익고 있던 시기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다만 동독 주민들에 의한 베를린장벽 붕괴 후에는 절반 정도의 서독인들이 동족 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정도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을 들은 많은 서독 주민들은 독일 통일이 국운을 바꾸는 기회요인으로 생각하고 베를린에 집결해 동독 주민들과 합세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리는 데 앞장섰다.

3. 동서독 정부의 역할

① 독일통일과정은 동독 주민들이 동독보다 훨씬 잘사는 서독으로 가고자 하는 삶의 질 욕구와 열정에 의한 것이지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 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다. 1969년 10월 브란트(W. Brandt) 서독 수상의 등장은 이전 아데나워(K. Adenauer) 수상의 '친서방정책'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동독의 존재를 부인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동방정책'을 주창하고 동서독 정상회담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브란트 수상이 전범국가의 수장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직접적 피해국인 폴란드의 나치 희생자들 묘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자세는 동서독 당국이나 동서독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해냈다.

② 독일 통일을 위한 각종 조약들은 전승4국의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동서독인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이었다. 동서독인이 독일 통일에 주도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전승4국 체제에서 벗어나고 독일

7) blog.naver.com/ipa1983/160228761 (검색일: 2020/09/12).

주민들에 의한 분단 독일이 통일 미래를 열기 위한 제스처였다. 이는 장차 독일 문제는 독일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통일의 잣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가 해낸 것은 동서독 정상 회담을 통한 독일 통합과 유럽의 협력과정이었지 동서독 주민들을 위한 통합 비전은 아니었다.

③ 동독을 대결의 상대가 아닌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 브란트 수상의 결단은 동독을 통일의 장으로 끌어내는 단초를 가져왔다. 이는 그가 서독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였겠지만, 항상 오랫동안 주요 사안마다 당원들 및 동료들과 함께 토론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독인들의 동독방문 기회와 동독인들의 서독방문으로 이어져 훗날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굳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④ 16년 동안 재임한 서독 콜(H. Kohl) 수상은 상호주의, 동방정책 비판적 계승, 대연정 정책 등을 펼치면서 주변 국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콜은 1982년 말, 독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불신임 투표로 사민당에서 기민련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립 정부 하에 수상에 오르게 되었다. 자민당과 기민련은 연립 정부를 수립하여 다수당인 기민련의 콜 대표가 수상에 취임하였으며, 사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존의 우방들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책의 지속성을 펼쳤다. 동서독 양국간의 정상회담은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 이슈를 중심으로 타결이나 합의 도출과정이었지, 동서독 주민과는 동떨어진 과제였음이 틀림없다.

⑤ 샤보브스키의 말실수는 오히려 1989년 일련의 동구의 민주화와 1989년 10월 동독 동독 내의 촛불시위 등 동독 주민들의 동독 공산당(SED) 지도부에 대한 저항과 공산당 내 상황대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10월 18일 SED 서기장 크렌츠(E. Krenz)의 공산당 독재 유지와 개혁 추진발표가 동독 주민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SED 서기장으로서 크렌츠(E. Krenz)는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행법을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려 했다(김영운·양현모 2009, 81).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 동독 주민 100만 명이 모여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도 그 흐름의 일환이었다. 1989년 11월 13일 취임한 동독의 모드로우(H. Modrow) 수상은 샤보브스키의 ‘말실수’와 국경개방 보도 및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위기 모면을 위해 서독과의 조약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 모드로우 수상은 1989년 12월 콜 서독-모드로우 동독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120억 마르크의 경제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콜 수상이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지원을 거부해, 그 이후부터는 서독의 상호주의 정책에 따라 동독은 서독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정주신 2020a, 128). 양측은 조약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협력, 20억 마르크의 공동여행 기금창설, 차관증액, 의무환전 제도 폐지, 정치범 석방, 브란덴부르크 문 개방 등에 합의하고 조약공동체의 틀 안에서 일련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⁸⁾

4. 주변 국가의 역할

① 1945년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할과 더불어 전승4국의 주변 국가들은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서독의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키면서 독일의 전범국으로서의 사죄와 또 다른 전쟁행위 종식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일이라는 국가에 대한 강제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 주변 국가의 역할론 만 강조할 뿐이었다는 한계를 보여줬다. 전승4국이 독일 분단을 강요할 때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통일 노력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동서독 정상회담이나 전승4국의 역할론 만을 바라보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개방 발언은 냉전이 해체되는 서막을 알렸다(정주신 2020b, 161). 그의 개혁과 개방 정책은 기존의 공산화 정책을 뒤엎는 혁명이었고 동

8) <https://www.dailynk.com/동서독-정상회담이-南北-정상회담에/> (검색일: 2021/02/23).

서진영 대립의 상징인 동서독을 흔들었다(김주삼 2020, 127). 1989년 동독의 민주화 바람은 촛불시위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조차 동서독 주민들의 줄기찬 개방과 여행자유화에 기인되었다.

②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으로 동구권의 변화물결이 동서독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은 그의 경제개혁과 정치개방 정책으로 동유럽의 민주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 역할론자로서의 동서독 통일에 단초가 되었다. 이처럼 코르바초프 등장 이후 동유럽의 민주화와 대변혁은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주민들에게 동독의 공산지배를 무너트리고 베를린 장벽 해체와 독일 통일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다(정주신 2020b, 161).

③ 폴란드⁹⁾가 1989년 4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6월 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주축이 되어 비공산당연립이 승리를 거두는 것¹⁰⁾은 동유럽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훗날 동독 주민 최초 민주적 1990년 3·18총선에서 서독과의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구동독 기독교민주연합 압승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동독을 탈출하는 동독 주민들에 의해서 독일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다. 폴란드의 민주화는 헝가리에서 공산주의와 무관한 쉬로시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고,¹¹⁾ 1989년 5월 헝가리가 국경개방을 단행하자 유례없이 동독 주민들 수백 명, 수천 명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정주신 2021, 276). 7월 17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설치되었던 철책이 철거되자 동독 주민들은 오스트리아로 피난 후 서독으로 갔으며, 이로부터 동독 주민들의 피난 물결은 점점 더 커

9)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점령 하에 폴란드 인구 3천만 명의 1/5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으며, 그중 유대인의 수가 약 300만 명으로 당시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거의 모든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10) 1991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바웬사(L. Wałęsa)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정부가 탄생하였다. 폴란드는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11) blog.naver.com/gustap83/221406859314 (검색일: 2020/04/24).

졌다(정주신 2021, 276). 1989년 8월 19일 범유럽 피크닉에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사이에 철의 장막이 열리면서 평화적 연쇄반응이 일어나 동독과 동구권이 붕괴되었다.¹²⁾ 이처럼 동독인들의 대거 동독 탈출은 베를린 장벽 해체와 통일 독일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¹³⁾

④ 1989년 5월 2일 독일 통일에서 결정적으로 물꼬가 트인 날 헝가리 정부가 국경 철조망 제거 작업을 선언한 날은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 열기를 불어 넣어준 바로미터가 되었다. 적어도 1989년 봄 이전까지는 통일정책이라는 접근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헝가리 정부의 철조망 제거 작업 이후 사태가 동독 당국의 대처 미흡 와중에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IV.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

여기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점차 거세어지는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은 물론 서독주민들과 함께 통일을 주도하게 됨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점은 독일 통일이 동서독 정상회담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와 전승4국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동독 주민의 역할

① 독일통일과정을 보면, 동독 주민들은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으로 행동했다. 독일 통일의 불씨를 지핀 역사적인 장소인 동독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St. Nicholas Church)에서 매주 월요일 독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집회를 열고 이 기도회가 점점

12) [https://ko.wikipedia.org/wiki/베를린 장벽 붕괴](https://ko.wikipedia.org/wiki/베를린_장벽_붕괴) (검색일: 2020/10/12).

13) blog.naver.com/gustap83/221402745534 (검색일: 2020/04/24).

커지면서 동독 주민들은 당시 동독 정권의 유혈 진압이나 발포 협박에도 불구하고 끈기있게 통일 열기로 응수했다. 결국 동독 주민들이 1989년 민주화 요구나 촛불시위, 더 나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린 것은 동독 주민들에 의한 통일과정에서 무혈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었다(정주신 2020b, 161)

② 서독의 TV와 라디오 및 위성통신 등 미디어가 동독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은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게 했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에 중차대한 역할에 기여한 셈이었다. 그동안 동독TV가 체제유지와 관련 너무 정치적 일색일 뿐만 아니라 천편일률적이고 편파적이어서, 동독 주민들은 동독TV보다 자유분방한 서독TV를 훨씬 자주 시청하였다. 그러나 서독TV 등 미디어의 방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 역할이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 서독 주민의 역할

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을 때, 서독 주민들도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였다. 다만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절반 정도의 서독인들이 동족의식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환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¹⁴⁾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을 서독 주민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을 붕괴한 셈이다.

②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동서독 주민들이 모두 환희에 차 있었지만 몇 주가 지난 후에는 그런 열기를 느끼기 어려웠다.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독 주민들의 요구로 통일이 가시화되자 서독 주민들은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1990년

14) blog.naver.com/ipa1983/160228761 (검색일: 2021/01/23).

3·18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흡수하고자 서독의 집권당이었던 기민당(CDU)과 제휴한 동독 기민당이 주축이 된 독일연합이 48%(사회민주당(SPD)은 22%)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장용석 2010, 23).

3. 동서독 정부의 역할

① 동독의 크렌츠(E. Krenz)가 SED 서기장과 수상에 취임한 이 과도 체제 시기는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동독 정부의 서독에 대한 흡수통일과정을 의미한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여파로 동독 공산당 내에서도 호네커에 대한 수많은 항의와 비난 여론이 들끓자, 호네커는 1989년 10월 17일 강제적으로 사퇴하였다. 10월 18일 호네커의 후임으로 크렌츠는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고 공산당 독재 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는 동독 주민 100만 명이 모여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결국 동유럽의 민주화와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호네커(E. Honecker)나 크렌츠(E. Krenz)가 연달아 사임(辭任)하는 등 결과적으로 베를린 장벽의 해체와 함께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정주신 2021, 277; 정주신 2020b, 161).

②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는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열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1989년 11월 29일 콜 정부의 통일조약 10개항¹⁵⁾을 이행해 나간 것이었다. 이 통일조약 10개항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협조 하에 이뤄졌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현실에서 동서독 간의 협력과 교류의 강화로 통일 독일을 이루려는 마스터플랜이었음이 틀림없었다. 콜 수상은 당시 베를린 장벽 붕괴 뒤 혼란 속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15) 콜 수상의 '통일조약 10개항'은 동독 지원, 동·서독 협력 강화, 동독에 자유·비밀 선거 도입, 군축과 군비 통제, 동독의 SED의 지도력 포기 및 정치범 석방, 계획경제의 폐기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며, 독일 통일을 안으로는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밖으로는 유럽 통합을 위한 일로 규정하였다(정주신 2021, 282).

‘통일조약 10개항’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담판을 짓고자 모스크바를 세 차례 방문하는 노력을 하였다. 다만 미국만은 유일하게 1989년 봄 동독의 사태 주시와 베를린 장벽이 해체 예견하며 독일에 협력하는 편이었다(박회락 2020, 258). 게다가 콜은 서독 연방 의회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독일의 통일을 동독과의 정치적 협상의 목표로 정식화했다. 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8월 동독은 기본법 제23조¹⁶⁾에 따라 서독 연방에 편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서독 간 정상회담은 정치와 경제가 어려워진 동독의 요청으로 198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콜-모드로우 정상회담은 동독 주민의 요청인 동서독 통일보다는 동독 집권세력이 동독 정세의 안정과 조약공동체에 중점을 뒀다.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0년 2월 13일에 또다시 동독의 요청으로 개최된 콜-모드로우 정상회담은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경제지원과 화폐경제 통합에 관한 의제였다.

④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동독 주민 최초 민주적 3·18총선은 동독 주민이 서독과의 통합을 열망한 결과 서독과의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구동독 기독교민주연합 압승으로 결과 졌다. 3·18총선 직전인 1990년 3월 15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을 신설해 소련 대통령직에 오른 후 1991년 12월 25일까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 3·18총선을 관망하는 등 독일 통일에 우호적인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였다.

⑤ 동서독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동서독 간 일체감을 유지하고 서독의 동독에 대한 상호주의 거래에 따른 포용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대 동독 지원의 특징은 동독지역과 서독 주민의 편익, 대가지급의 형식, 대동독 지원의 투명 등에 있었으므로(김현호 2000),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불투명, 남북한 주민과 무관한 엄청난 대가, 일방적인 지원과는 달리 서독의 동독 지원은 철저하게 동독주민을 겨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조건을 달아 대가지급의 형식으로 돈을

16) 당시 서독의 기본법은 동독은 서독 기본법 효력 범위에 편입됨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규정(제23조)과 통일헌법을 제정해 법적인 틀을 만들어 통일을 추진 하자는 내용(제146조) 등 두 가지 통일 가능성을 열어 놨다.

주었다는 점이다(정주신 2020a, 128). 예컨대 서독과 베를린간의 통행료와 도로사용료를 일괄지급,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총 3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시키고 25만 명의 이상가족의 재결합 대가로 34억5,000만 마르크 지원, 동독주민이 서독을 단기 방문할 경우 방문환영금 제공 및 동독주민의 의료지원에 많은 물자 제공, 서독이 19억5,000만 마르크의 대 동독 현금차관 지불보증 시 협상개시 조건으로 동·서독 간 국경에서 여행규제 완화와 총격사살 행위 금지 요구 등이 그것이다.¹⁷⁾

4. 주변 국가의 역할

①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 사건은 독일인에게는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독은 전후 수십 년간 나토와 유럽공동체에 대해 나름 헌신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서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유럽의 태도는 각종 핑계를 대며 독일 통일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정주신 2020b, 174). 1989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일조하였다(정주신 2020b, 174).

②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듯이, 독일 통일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의 우위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만은 1989년 봄 동독의 사태를 주시하며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편에 섰다(박휘락 2020, 258). 이로써 서독 콜 수상의 통일조약 10개항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독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케 했다. 이를 계기로 1989년 12월 2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미·소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 선

17) 그 외 동독이 서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서독 정상회담을 상호주의 원칙을 유지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20a, 125).

언 지지, 동독의 요청에 의한 두 차례의 콜-모드로우 정상회담, 동서독 양측의 필요에 의한 콜-드메지어 정상회담 등이 뒤를 이은 것은 그 주체가 동서독 주민에 의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댓가로 볼 수 있다(정주신 2021, 282). 동서독 주민들의 이뤄놓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순차적인 통일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 다름 아닌 동서독 간 혹은 미소 양국 간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정상회담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방증이었다. 그것이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독의 재정적 지원이 상호주의에 따른 결과일지언정, 혹은 미국이 주도한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지지일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열기에 따른 결과의 소산이었다.

③ 1985년 등장 이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동유럽의 민주화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였듯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또한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전승4국의 동의가 관건이었다. 그 인과관계는 1989년 동독 주민에 의한 촛불시위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듯이, 전승4국의 회담체인 2+4회담¹⁸⁾도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열기에 뒷받침해서 독일 통일을 앞당겨지는 회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정주신 2021, 281). 1990년에 진행된 동독과 서독 2국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4국의 대표로 구성된 2+4조약에 관한 협상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전승4국 체제가 무너진 이상 독일 통일을 무조건 승인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였다. 2+4회담을 통해, 양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4국간의 독일 통일 동의는 승전4국이 오히려 독일 통일을 승인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김강녕 2020, 232).

18)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1990년 '2+4'회담 일지는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20b, 169-170); 그리고 2+4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정주신 2020b, 167-171).

V.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여기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분단 독일의 사례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의 사례가 향후 분단 한국 및 통일 한국에 미칠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를 남한 주민의 역할, 북한 주민의 역할에 중점을 두되 부수적으로 남북한 정부의 역할, 주변 국가의 역할 등의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남한 주민의 역할

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음을 목격하였을 때, 남한 주민으로서는 한반도 통일도 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하였다. 그러나 남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독일 현상과 달리 남북간의 체제와 이데올로기 및 이질감이 더욱 커져 남북간 통일은 희망사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역할을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남한 주민으로서는 DMZ 장벽이 놓여있는 현실에서 DMZ 장벽 붕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 지를 고려하면서 어떻게든 베를린 장벽을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② 1993년 6월부터는 북미간에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가지고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쌍방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8일 2시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남한 주민에게 한반도 통일의 열망을 갈구하게 되었으나 북한이 세습체제의 특성상 통일이 요원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또한 그의 권력 세습으로 이미 2010년 김정은이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던

서 강고한 후계체제로 들어서는 배경이 되었지만 남북한 주민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역할은 더욱 전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북한이 폐쇄국가이자 세대세습 권력체제이어서 남한과의 통합과 통일을 거론하는 게 모순점이 될 수 있지만, 여하튼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오갈 수 있고 남한 주민이 북한을 오갈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③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남한 주민에게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화해·협력이라는 동서독 회담의 중요한 상징이 한반도 통일의 잣대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 주민에 의한 통일 문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 처지에서 남북한 정상회담만이 유일한 창구이자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한 주민의 역할을 통해서 남북한 통일을 성취할 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한다.

2. 북한 주민의 역할

①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하고 서독 정부의 손을 잡았고 통일을 열망하여 독일 통일이 이뤄진 것처럼, 북한 주민이 체제저항이나 민주화를 통해 북한 정권을 타도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북한 주민의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도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 주민에 의한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동유럽의 민주화가 동독의 촛불시위로 바뀌면서 다가선 것이 궁극적으로 동독 주민에 의한 베를린 장벽 붕괴가 통일 단초인 셈이었다.

②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정치적 불안정마저 이전보다 심화되고 있는 이때,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한 간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 간 관계가 남북한 주민들이 선도할 수는 없지만 당국간 교류와 협력은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요체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할 때 가능한 것이다.

③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미디어가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해 온 것이 그들의 통일에의 주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주민이 남한TV나 미디어 방영 시청하면서 인간다운 생활로 나와야 북한 주민이 원하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탈북해온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북한에서 남한의 TV 및 라디오 방송 시청취는 불가능하지만 남한 가수들의 대중적인 노래나 가수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나 라디오가 가시청취권이고 접근이 많은 관계로 동독에서 쉽게 서독의 일상을 감지해 오던 터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면, 현실적으로 폐쇄적인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일상조차 모른채 지내기 일쑤였다.

④ 북한 주민이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남한의 주민으로 거듭 태어나는 통일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2020년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3,752명이며,¹⁹⁾ 이들의 계속된 증가 추세로 보아 북한 주민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거해 남한에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일부 제한적이지만 북한 주민과의 폰전화 통화나 북한 인근인 중국에서의 접촉 등 다양하게 북한 주민과 친인척과 소통관계를 꽤 해 오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들이 남한에서 직업을 갖고 잘 살고 있다는 의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으로의 탈출과 한국 통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3. 남북한 정부의 역할

①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한 정부의 역할은 남북정상회담이 유일한 창구이다. 주지하듯이 동서독 정부도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통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검색일: 2021/06/19).

해 통일과 통합을 꾀했지만 양국간 일방적 주장과 어젠다 차이로 실효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독일 통일이 동서독 정상회담의 산물일 수 없었듯이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데 동서독 주민들이 주도적이었듯이 동서독 통일도 동서독 주민들의 몫이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 역할은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독일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든 참고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형식적인 정상회담에 운명을 걸지 말고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교류하고 방문과 여행을 통해 남북한 통일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② 우리 국민에게 38선과 DMZ는 철조망과 지뢰밭, 무장한 군인들로 기억되고 있지만, 베를린 장벽의 초기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전승4국의 개입과 분할점령지역으로 분할된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단 그 자체였다. 독일은 제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의 책임 때문에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 분할로 2중 분단된 데 비해,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되었으나 미·소연합국에 의해서 북위38선 이북(以北)은 소군정이 점령하고 이남(以南)은 미군정이 점령함으로써 남북한은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당한 채 분단되었다. 이 38선은 남북간 체제와 이념으로 촉발된 국내전인 6·25전쟁과 그 휴전선으로 공고화되면서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자 남북한 허리부분에 가로놓인 DMZ로 남아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6·25전쟁으로 민족이 분열되고 이산가족이 형성된 것을 정상회담을 통해 당국자들이 결자해지해야 만이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정부가 체제와 이데올로기 및 민족 분열을 겪고 난후 통합과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③ 독일 통일에 다리를 놓은 동서독 교류·협력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시 서독 현실과 한국 간에 유사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서독 브란트 수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이 화해·협력 정책에 지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남북한 상황이 동서독 분단과 중첩된다. 다만 콜 정부에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과 대화가 통일을 앞당겼듯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대북 퍼주기 식이었다는 데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남북한 분단을 통일한국으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독일식의 상호주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며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4. 주변 국가의 역할

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등 주변 국가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우선책을 북핵 저지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국가는 주변 국가들의 기대와 달리 3대세습에 골몰하며 핵무기를 전제로 체제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체제유지는 물론 북미정책의 돌파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현실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북핵문제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진다면 주변 국가들이 동의하고 남북한 정부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방안²⁰⁾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북한주민의 탈북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나 동남아 등 주변 국가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

20)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병합해 참전(參戰)한 것처럼 독일 분할 당시 전승4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나 전승4국이 베를린 회의(1954)를 개최한 뒤 국민합의의 국민투표 치르고 각국과의 사이에 영세중립 조약(1955년 5월 15일)이 조인되었다(박수희 2021; 정주신 2021, 269).

할 때이다.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 모두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며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으로의 송환이나 강제추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속마음은 핵보다는 장마당 건설과 따뜻한 남쪽나라에의 염원이 깃들여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③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남북정상과 북미 정상 만남의 연례적 추진해야 한다. 독일 통일처럼 미국이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정책에 공감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요청인 통일을 위해서는 기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잠정중단 된 2+4회담 재개를 통해 이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통일의 중요성을 호소하여야 한다.

VI. 결론

이 글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온 동서독 주민들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동서독도 그렇지만 남북한 통일문제는 정치적 산물인 것처럼 당국간 대화, 즉 최고통치자들 간의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해왔다. 당연히 양국간 정치외교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인 양 해왔던 것이다. 동서독도 그렇고 남북한도 정상회담의 어젠다를 내세워 통일의 물꼬를 트고자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은 그 와중에서 베를린 장벽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소련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변화가 겹쳐 일어났다. 즉 소련의 지배를 벗어난 동유럽의 민주화과정은 동독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 통일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상황이 동서독 주민들로 하여금 베를린 장벽을 허물게 하면서 통

일을 활짝 열어낼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논의되고 다룬 정책적 방향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동유럽의 민주화가 마침내 동독에서 촛불시위로 이어졌다는 데서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동서독 정상회담만이 통일의 주요 창구였으나 그 어젠다 설정과 실익은 미미하였다. 정상회담 어젠다도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어젠다도 그 실행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정상회담이 걸돌면서 반백년에 이르렀으나, 동서독 뿐만 아니라 베를린조차 전승4국에 분단되고 관리되면서 통일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 고르바초프가 탈공산주의 노선을 펼치면서 동유럽이 자유화 내지 민주화 과정을 밟으면서 동독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결과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동서독 통일을 일궈낸 것이었다. 특히 동독 당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국경개방이라는 ‘말실수’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재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와 주변 국가들의 역학관계는 동서독 통일을 위한 협력관계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장벽은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이 동시에 남북한의 분단과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으로 남은 상흔이자 아직도 미해결된 DMZ에 모아지고 있다.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것처럼 DMZ 또한 남북한 주민들이 붕괴시키는 방도 외엔 정답지가 없을 것이다.

둘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점차 거세어지는 통일과정은 동독 주민들은 물론 서독주민들과 함께 미국을 위시한 전승4국조차도 독일 통일 대열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독일 통일이 동서독 정상회담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계속 되는 정상회담을 동서독은 이를 통일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었지만 통일의 결정타는 아니었다. 정상회담에서의 어젠다 설정도 불투명하였고, 그나마 실낱같은 정상회담 의제가 있더라도 그 실행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게다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경제력이 흔들렸고, 그 일환으로 동독의 경제도 어려움에 가중되었다. 결국에는 동서독 정상회담 자체가 서독이 동독을 지

원하는 형태에 불과했다. 당연히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고, 동독 3·18총선은 서독과 통일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와 전승4국의 역학관계는 독일 통일을 위한 콜 정부의 통일조약 10개항을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전승4국도 독일 통일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에서 민주화를 주창하고 독재정권인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야 하는 북한에서 민주화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만약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으로 분단을 허물 수도 없고 남북한 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완수해 낼 수 없을 때, 결국 주변 국가들에 의한 중립화나 1국 2체제 연방제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셋째,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분단 독일의 사례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의 사례가 향후 분단 한국 및 통일 한국에 미칠 수 있는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를, 남한 주민의 역할, 북한 주민의 역할, 남북한 정부의 역할, 주변 국가의 역할 등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적요하고 분석한다. ①남한 주민의 역할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통일에 대한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 통일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리라 예견한 바 없이 어느날 갑자기 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도 동서독 정상회담과 다를 바 없지만, 어젠다가 불투명하고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도 확신이 없었다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면에는 통일의 역군인 동서독 주민들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남북한 정상들 간의 회담도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을 배제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및 군사적인 접근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그 통일 관련 이슈는 남북한 주민의 역할보다 못할 수 있다. 북한의 주민이 남한 주민보다 정치적 및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선도해서 통일을 일궈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 ②북한 주민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며 통일 한국에 가장 첨예하게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체제에 예속된 상황이지만 어느날 갑자기 북한체제를 뒤바꿔놓을 수 있는 민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으로 살다 남한으로 목숨 걸고 넘어 온 북

한이탈주민의 존재는 북한 주민의 미래이자 희망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세심히 살펴줘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존재가 살아나고 그들이 남한으로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하도록 주변 국가들의 역할과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③남북한 정부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핵문제가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루속히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통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대북정책을 펴주기 식으로 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독일 통일을 가져온 것은 펴주기 식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있었음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독일 통일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나 정당의 움직임이 절대적이지 못했음을 남북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한 자들은 다름 아닌 동서독, 특히 동독 주민들이었다. 남북한 정부가 통일을 여는데 대세가 아니라면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④주변 국가의 역할은 그들이 남북통일에 인식하다는 데서 남북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과 주변 국가들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을 일구는데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들에게 우호적이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일 통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서야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동서독 당국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은 동서독 주민들에 의한 베를린 장벽 붕괴가 초래되고 나서야 독일 통일에 협력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남북 주민들이 통일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비정부 차원에서의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것이다. 독일 통일이 동서독 주민들의 베를린 장벽 붕괴가 기폭제가 되었는데,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합일될 때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은 통일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고 당위적으로 통일을 일궈내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이 동서독 주민들에 의해서 이뤄졌듯이, 결국은 남북한의 통일도 남북한 주민들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20. “효과적인 해외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군사통합 방향 연구: 독일 군사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강녕. 2020. “동서독 정상회담: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경미. 2002. “독일 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국신 외,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도태. 1996.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김면희. 2010. “통일 독일의 정치지형 변화 연구: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2호.
- 김영윤·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서울: 통일부.
-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종갑. 2003. “독일 정당제도의 균열이론적 고찰.”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 김주삼. 2020. “독일 통일과 국내외적 환경요인.” 『한국과 국제사회』 4(6).
- 김학성. 2002. “독일의 통일문제와 국제정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 김현정. 2020.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샤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4(6).
- 고상두. 2015. “독일통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초당적 협력: 전개과정과 수렴요인.” 『국제지역연구』. 제19권 1호.
- 권형돈. 2012.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과 발전.” 『공법연구』. 제41집 2호.
- 박수희. 2021.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에 대한 재고.” 『한국과 국제사회』 5(2).
- 박진완. 2014.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재산반환문제에 대한 검토.” 『유럽헌법연구』, 제16호.
- 박희락. 2020. “독일통일 과정의 함의와 한국의 통일 준비.” 『한국과 국제사회』 4(6).
- 배기정. 2005. “‘미디어의 혁명’인가 ‘미디어 쇼’인가?: 독일 통일 과정과 서독TV의 역할” 『독일 어문학』. 13(3).
- 백경남. 1991.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서울: 강천.
- 비피정치연구소편집부. 2018. 『독일통일로 본 한국통일의 과제: 독일통

- 일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본 한국통일의 과제는?』. 서울: 비티타임즈.
서병철 편. 2003. 『분단극복을 위한 초석: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서울: 매봉.
- 서지원 역. 2004. 『도이치 현대사2: 변화와 모색』. 서울: 비봉출판사.
- 손선홍. 2016. 『독일 통일 한국 통일: 독일 통일에서 찾는 한반도 통일의 길』. 서울: 푸른길.
- 신두철. 2014.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제도화와 정치기회 구조.” 『유럽연구』. 제32권 4호.
- 신선홍. 2005.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 신인아. 2008. “냉전기 동독관계와 현재 남북관계의 비교: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6권 2호.
- 신종훈. 2013. “통합과 독일 사이에서: 아데나워 정부의 유럽정치와 독일정치 사이의 긴장” 『EU연구』. 제33호.
- 심영섭. 2015. “독일통일과정에서 위성방송의 역할에 대한 연구.” 『문화와 정치』제2권 2호.
- 안병역 역. 2000. 『통일을 이룬 독일 총리들』. 서울: 한울.
- 알렉산더 폰 플라토. 2010. “독일의 통일: 유럽을 둘러싼 국제적 권력게임.” 『독일연구』제 20호.
- 유진숙. 2008. “독일의 수상리더십과 정당: 제도와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8권 2호.
- 유진숙. 2011. “독일 통일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 수상리더십과 정당정치적 요인.” 『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제4호.
- 이정우. 2011. “독일 통일과에서 복지국가 역할.” 『경상논총』. 제29권 3호.
- 장용석. 2010. “독일통일, 동독주민이 선택한 합의 통일.” 『통일한국』. 통권 322호.
- 전종덕. 2019. 『독일 통일: 재통일인가 통합인가?』. 서울: 백산서당.
- 정병기. 2003.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 개혁과 통일의 갈등.” 『통일정책연구』제12권 2호.
- 정병기. 2011. “통일 독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4호.
-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서울: 동국대 출판부.
- 정주신. 2020a.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 비교연구: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4).
- 정주신. 2020b.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한국과 국제사회』 4(6).

- 정주신. 2021. “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한 변증법.” 『한국과 국제사회』 5(2).
- 정태일 외. 2020.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검토: 알타회담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6).
- 최영태. 2018. 『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 동방정책에서 내적 통합까지』. 서울: 아침이슬.
- 프랭크 지렌·귄터 샤보프스키, 심재만 역. 2016. 『동독 멸망 보고서: 동독 최후의 순간들』. 서울: 하늘북.
- 허준영·정다원. 2017. “인권과 행정관리의 절충적 국경관리?: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원칙과 실제.” 『Crisisonomy』 제13권 제10호.

Schwarz, Hans-Peter. 2010. "The division of Germany, 1945-1949." Melvyn P. Leffler/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Origins. Cambridge.

Wendt. 1991.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Bilanz einer 40jährig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Deutschland Archiv*. Vol. 24.

blog.naver.com/ipa1983/160228761 (검색일: 2020/09/12).

blog.naver.com/ipa1983/160228761 (검색일: 2021/01/23).

<https://blog.naver.com/ipa1983/160228761> (검색일: 2021/02/15).

<https://blog.naver.com/samsum3535/222268625272> (검색일: 2020/03/21).

<https://www.dailynk.com/동서독-정상회담이-南北-정상회담에/> (검색일: 2021/02/23).

<https://blog.daum.net/msk1953/13747743> (검색일: 2020/06/21).

https://ko.wikipedia.org/wiki/베를린_장벽_붕괴 (검색일: 2020/10/12).

투고일 : 2021년 5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5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24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로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야: 유신체제의 붕괴』,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공저), 『4·15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다. 그 외 논문으로는 한국과 동서독 통일 문제, 한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음악과 글로벌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Role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in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 The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hung, Joo-Shin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eople of East and West Germany who have played a driving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and to come up with way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that can be taken from them. In other words, as the role of East and West Germans sets a simple precedent for achieving a unified German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the role theory of South and North Koreans is in a unified Korea. The role theory played by East and West Germans in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cannot help but be benchmarked for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South and North Koreans. To this end, research methods on the popular behavior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non-political fields are used. In particular, the role analysis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is to be considered separately before/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implication of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to link the symbolism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to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still in a state of confrontation. In conclusion,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can be said to have been achieved not by the cost of the summit but by the voluntary and non-political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keywords :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East and West Germans, Berlin Wall collapse, inter-Korean re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